

# ‘노동자에 책임 넘기는 개혁 반대’

## 공공부문 노동계 공대위, 총력투쟁 선언 ... “공공부문 부채는 실패한 정책 탓”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5개 산별 연맹)는 4일 청와대를 향의 방문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나서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부문 개혁을 예고했지만, 파티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방만경영의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지난 수십년동안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 경영평가와 각종 감사를 통해 강력히 통제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사회약극화와 정국혼란을 무마시킬 방편으로 꺼내든 카드가 공공기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원인도 방만경영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부채를 강제로 떠넘긴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에 수조원의 부채를 떠넘긴 4대강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



4일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소속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거리에서 이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제공

주택 정권자원의 정책실패와 정부가 얹혀놓은 낙하산 사장이 부채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향의방문을 주도한 공공노련 이인상 위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부문을 개혁하려면 노동자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공공부문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

다”며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회생을 강요하는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총력투쟁방침을 밝히고, 11일 293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모임을 열어 구체적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

련(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 김주영),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등 5개 산별과 연맹이 참여하고 있고, 조합원은 34만여 명에 달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